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 및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필요성 논의
- 청년 교육·일자리 정책 방향 및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 논의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4.2.(목)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 개요 >

- (기능)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2012년~)
 - (위원)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 (분과) ①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 ②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 변화 대응 등), ③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
- * (미래사회전략반, 6명)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분과장),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김기선 충남대 법전문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 환경공학과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 필요성, 청년의 교육과 일자리 정책 방향,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권오현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정책지원은 목표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획일적 지원이 아닌 성과에 따른 자원배분 등 성과기반의 운영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장기 시계 하에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서 범국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증과 사업확장 기회를 갖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스타트업에는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 기능 시연 등의 기회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훌륭하지만, 관련 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기술개발 이후 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우수한 기술이 현장 적용을 거쳐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 도입뿐 아니라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 수립·운영시 지방 주민의 실제 생활 기반과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 가능한 영역과 구조적으로 지속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청년실업률이 높음을 지적하며, AI 도입 확산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대학교육·직업훈련 개편 및 일자리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박철건 (044-214-1610)
		담당자	사무관	박승환 (niceguystar@korea.kr)
		담당자	사무관	어우주 (hidhwr@korea.kr)
	미래전략기획실 포용사회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14-1710)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jihyesim@korea.kr)	

